

남북 첫 고위급 접촉 … 치열한 탐색전

남북문제 포괄 논의… 구체적 합의 없어

남북은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접촉을 했다.

우리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이날 접촉에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는지 여부는 즉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5분~11시23분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고, 오후 2시5분부터 2시간 동안 오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정회에 들어갔다.

이날 논의는 특별한 쟁점을 두고 서로의

견을 즐기보다는 양측이 서로 제기하고 싶은 의제를 내놓고 자신들의 입장 설명 한 뒤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유라시아 아인셔티브 등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설명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북한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취소 등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내놓은 소위 비방증상 중단을 포함한 '중대제안'과 관련된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문제도 제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접촉에서 북한이 지

금껏 직·간접적으로 제기한 것 외에 새로운 의제를 꺼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규현 1차장은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한반도를 여는 기회를 탐구하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접촉의 의제와 관련한 질문에

"아시다시피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남북관계 사안을 중심으로 하지만 저희

로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핍의대로 잘 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8일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안했고 남북은 이후 외부에 비밀에 부친 채 물밑 접촉을 통해 11일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당국간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제공>

시 선관위, 광주시 공무원 2명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강운태 광주시 장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업적 등을 인터넷신문사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시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강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와 업적 및 이용섭 의원에게 불리한 기사를 발췌·작성해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

는 자)와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공표하거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광주시 선관위 박찬진 지도과장은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공무원의 출서기나 출세우기 등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검찰, 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촉소·언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희 부장검사)은 12일 김 전 청장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뤄보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유서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대선 직전인 16일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유서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균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월액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1층 의류매장 / 금융기관 / 커피숍
핸드폰매장 / 편의점 / 약국
331.38m² / 76.42m²

2층 의류매장 / 금융업소
커피숍 / 휴게음식점
593.17m² (주 179.43평)

3층 전문의원
안과·이비인후과
치과·피부성형과
사무실 / 학원
1164.9m²
(주 352.38평)
365.58m²
216.87m²
582.45m²

4층 아스터어학원 임대확정
유튜엠 수학학원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전속물건 - 공동증개환영

公 告 利川徐氏 尚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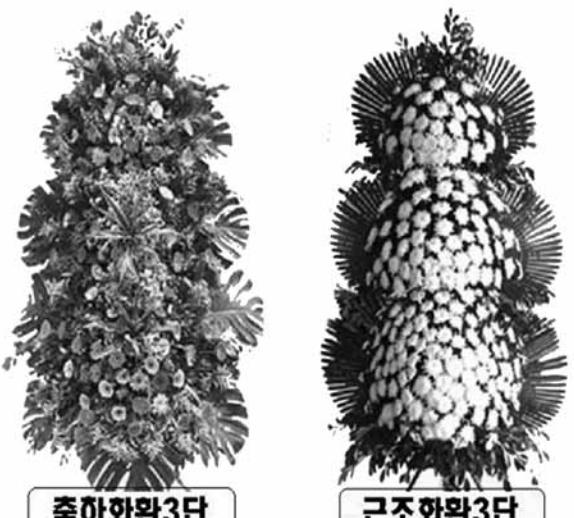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尚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민주 전남도당, 18일까지 도의원 후보자 공모

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남도의원 예비후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할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와 예비후보자자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하고 19~20일 심사 및 공고, 22~23일 이의신청자 서류접수, 24일 이의신청위원회 개최 등의 일정을 잡았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윤석 위

“위안부, 형언할 수 없는 잘못 … 日이 해결해야”

무라야마 전 日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90) 전 일본 총리는 12일 일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성의 존엄을 빼앗은 행언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 강연회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일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어제 한국에 입국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보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국과 일본 양측이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 여리 이상한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부끄럽다"며 "(일본) 국민 대다수는 저희가 나빴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한국 국민도 이 점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이 과거 역사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의 불협화음은 유감스러운 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를 반성한 후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신이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에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며 "이 표명을 존중하며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담화를 발표할 때에도 만일 부결되면 사퇴하겠다는 각오로 나섰다. 그만큼 중요한 담화"라며 "발표 후 일본 내 일부에서 '매국노'라는 비판까지 들었지만, 누가 매국노인지 반문하고 싶었다. 이 담화는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이 과거 역사를

계도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통일부의 입장을 배려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거듭 설명했다.

전 전 실장의 후임으로는 전성훈 통일연구원장이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전 원장이 통일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력이 많은 분이라서 발탁된 것 같다"면서 "내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경 경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전 비서관이 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싸고 강경노선을 고수하는 기준 청와대 인사들과의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북한의 전격 제의로 11일 성사된 남북고위급 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설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